

“바람 불면 더 큰 불길 날 수 있어”

26개 단체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기독교행동’ 출범… 전북 기독교 시국선언·기자회견

전북기독교단체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보탠다. 전북기독교인들은 2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지역 기독교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26개 전북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기독교행동’의 공식출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사회적 책무에 다하지 못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다 하지

못한 죄를 뼈아프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4년간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무능력과 무책입한 태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정권을 더 이상 지켜보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 부정 대선 개입으로 출발한 현 정권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역사 교과서 협정 등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없을 끔찍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더니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촉

발했다”며 “국가 최고 권력을 사교에 빠진 비선세력들에게 넘겨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은 10월25일 대국민사과에 이어 11월4일 대국민담화를 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표명했지만 이제는 말을 바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국민을 또 다시 우롱했다”며 “민의를 외면하고 소통부재 기만 겁박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 기독교인들은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밝히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촛불이 금방 꺼진다고 했지만, 바람이 불면 더 큰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김장배추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25~26일 도청 광장에서... 200여 품목 20~30% 할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김장재료 가격이 폭등하자 전북도가 직거래장터를 연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김장배추를 산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도청 광장에서 ‘김장배추·양념채소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배추와 무·

양념채소·소금·젓갈·쌀·가공식품 등 로컬푸드 200여 품목을 20~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배추는 1인당 15포기(5망)까지 살 수 있으며, 5망을 사면 배추(1망)와 생강(1.5kg)을 덩으로 준다.

특히 최근 가격이 폭락한 생강, 소금, 쌀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고민형 기자

도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박진웅 전 후쿠오카 총영사

박진웅 전 후쿠오카 총영사가 전북도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임명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전북의 동북아 국제통상 관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등을 마련해 줄 국제관계대사로 박진웅 전 후쿠오카 총영사가 임명됐다.

경북 경주 출신인 신임 박진웅 국제관계대사는 외무고시(18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홍콩영사, 타이베이 부대표, 선양 부총영사, 상하이 부총영사, 후쿠오카 총영사 등을 역임해 동북아 국제관계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풍부한 국제교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017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확정이 10여 일 앞둔 가운데 21일 송해진 도지사가 서울 국회를 방문해 주광덕(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와, 김광수(국민의당) 예결소위원, 오세재(더민주) 예결소위원을 만나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박 대통령 퇴진 운동본부’ 출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전북 국민주권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현판식을 도청 건물에서 갖고 본격적인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전북 국민주권운동본부는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운영위원회·운영지원단·자치단체장 의장단 연석회의·대변인단으로 구성됐다.

국민주권운동본부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 권한을 회수하기 위해 나서며, 활동기한은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이다.

김춘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도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깊어가고 있다”며 “헌법 제30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고 밝혔다. /뉴스스

남·임·순 재난안전사업 특교세 30억 확보

이용호 의원, 남원 13억원·임실 9억원·순창 8억원 배정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1일 남원시 4개 세천 정비사업, 임실군 관내 침수지역 및 교량 정비사업, 순창군 관내 교량 재가설 사업 등 지역구 재난안전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남원은 ‘산내면 상황마을 세천 정비사업’에 5억, ‘덕과면 소남정 뒤뜰 세천 정비사업’에 3억, ‘사매면 계동마을 세천 정비사업’에 3억, ‘주천면 방죽골 세천 정비사업’에 2억이 각각 배정돼, 총 13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4개 세천은 잦은 범람으로 농경지와 주택에 침수피해를 일으켜왔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실은 ‘관촌리 침수지역 해소사업’에 5억, ‘월치마을 소교량 정비사업’에 4억이 배정, 총 9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관촌리 침수지역은 섬진강천 합류부의 저지대로 매년 도로 및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월치마을 소교량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번 2개 사업으로 침수피해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은 ‘구림 새마을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8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교량은 1985년 새마을사업 당시 설치된 노후교량으로,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사업은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교세 배정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고질적인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교세 배정을 위해 공조한 3개 지자체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11월 1일까지 행정자치부 특교세 47억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교세 13억원을 배정받은 바 있어 현재까지 총 90억원의 국가예산을 배정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내년 유아모집 선별계획 발표

21일 전북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유아모집 선별계획’을 발표하고, 의무사항과 우선 모집 대상 등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100% 수용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은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100% 반영해야 하며, 다문화 가정과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50% 이상 반영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법정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정·다자녀 가정·한부모 가정 등을 30% 이상 반영해야 한다. /뉴스스

김승환 교육감 “청와대가 범죄생산기지 됐다”

“대통령 대기업 대상 공갈... 우병우에 대한 ‘침묵’도 이해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범죄생산기지로 전락시켰다”

김승환 교육감이 2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으며 단 한 시간도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성토했다.

지난 주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

동정범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탄핵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헌법 65조에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대상이 되고, 111조 1항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자질구래한 행변을 쏟아내는 청와대와 대통령은 품위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소장에 따르면 기업 총수·회장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돈

내라 했고, 기업들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냈다고 한다”며 “이는 형법 350조의 공갈죄에 해당되며,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공갈을 한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침묵도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병우가 범죄증거를 파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063-288-9700 www.jjmaeil.com